

지방자치·종합

■ '5·18'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명시

지역민 노력 결실... '광주의 힘' 통했다

市·시민단체, 중학교 사제후 연석회의 발족

2만8000여명 '온라인 서명' 참여 정부 압박

5·18 민주화운동이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포함되기로 지난 16일 결정된 데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시민들의 각고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분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1월 9일 5·18 민주화운동을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자 지역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민이 피와 땀을 흘리며 지켜온 민주화운동 역사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했다. 강 시장은 교과부 발표 다음날인 10일 운봉군 시의회 의장과 장휘구 시교육감에게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해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철회와 5·18 정신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다. 지역 내 반발 여론이 커지자 강 시장은 13일 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 연석회의를 제안해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정부를 압박해왔다. 강 시장은 또 김홍식 국무총리와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이주호 교

과부장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을 면담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수정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광주시는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포함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2만 8000여명의 누리꾼들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교과부는 같은 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하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내기도 하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연석회의 참여단체는 80여 개에서 200여 개 단체로 늘었고, 22일엔 국회에서 여야 정당대표들을 초청해 5·18의 역사교과서 반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듣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을 만나 집필기준 삭제 반대를 요구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5·18이 고등학교 집필 기준에서도 삭제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결국, 이 같은 노력 덕에 민주화 운동과 역사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지역여론이 반영돼 5·18 민주화운동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포함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 시장은 16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고 역사 정체성 확립에 동참해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5·18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민주화 운동사에 길이 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동차 번호판 발급비 20% ↓

광주시, 내년 7월부터

'5·18 트라우마센터' 건립 탄력

복지부 시범사업 선정 국비 67억 지원 받아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추진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5·18 관련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치료·재활 등을 위한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업비 135억원(국비 67억원·시비 67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광주시가 시범사업 유예에 참여를 기꺼워왔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인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고 5·18 관련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통합 촉진 및 조기 중재사업, 자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 건립 부지

로는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5·18 자료가 전시되는 가톨릭센터와 당시 부상자를 치료한 역사적 공간인 옛 국군통합병원 등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광주시가 5·18 자유공원 일대를 트라우마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영창, 헌병대, 법정 등 당시 유공자들이 고문 등을 당한 장소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5월 유공자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의 기능, 건립 위치, 운영 주체 등을 검토하기 위해 5·18단체 대표와 전문가·보건복지부 담당자·시민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5·18 피해 당사자 등 관련자 28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1.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다. 5·18 이후 자살한 광주 피해자는 40여명(10.8%)으로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 0.02%의 500배에 달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명숙 징역 5년 구형

광역육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5800만원 상당)를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징역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비합리적으로 거꾸로 판결한 공소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내년 7월부터 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을 20%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번호판 발급 비용을 1만 1000원에서 8800원, 소형은 385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발급비용보다 18% 낮은 최저 발급수수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전국 첫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형 선입금제 3곳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비용 인하가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간접적인 경제효과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 관료의 '脫정치' 출판기념회

이병훈 추진단장 22일 오후 3시 DJ센터서 문화 CEO초청 일자리 창출 위한 대담형식



이병훈 추진단장은 자신의 저서에 대해 초판축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이를 문화계 일문일담으로 진행한다. 이 단장은 저서에서 "그동안 서구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문명의 균형을 바로잡아, 보다 인간적이고 다양한 세상을 지향하려고 갈망한 문명의 욕구가 지금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작점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놓여 있다고 역설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보고서를 겸한 문화정책 전문서적이란 평을 받는 그의 저서는 일단 신변잡설, 회고담, 자기자랑 일색인 정치지망생들의 책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으로 지난 5년간 광주와 맨살을 부대껴온 이병훈씨가 내년 총선에 뛰어들면서 지극히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병훈 단장은 오는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일선에서 총지휘하던 경험과 자신의 문화정책 철학을 담은 '아시아로 통하는 문화(열화당)'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우선 정치인들을 일절 초대하지 않았다. 공관을 노리고 정치적 보스에게 덕담을 청해 듣거나 기관·단체장·유력인사들로부터의 축하 격려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게 정서관 출판기념회의 공식이라는 점을 감안

이대통령, 日 총리에 위안부 우선 해결 촉구

日 총리 '평화비' 철거 요청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교토 영빈관 스미에이노마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평외고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군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토 영빈관에서 열린 노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서 회담 내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의 진정적 노력을 요구했으나, 노다 총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혜'를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노다 총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 철거요청이 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갈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동번영과 역사 평화·안보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80세 이상으로 몇 년 더 있으면 다 돌아가실 수 있다"면서 "일생의 한을 갖고 살던 예순 세 명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양국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적 입장을 아실 것"이라며 "우리도 인도주의적 배려로 협력해왔고, 앞으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auction notice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auction notice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auction notices.